

碩士學位請求論文

統一與件의 變化와 統一教育의 새로운 方向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張 相 寶

1994年 8月

# 統一與件의 變化와 統一教育의 새로운 方向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張 相 寶



張相寶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장

근

형



審査委員

고

성

근



審査委員

상

원

석



〈 초 록 〉

## 統一與件의 變化와 統一教育의 새로운 方向

張 相 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 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개됐다. 첫째 목적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통일환경을 국제환경, 북한의 현실, 남한의 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이러한 통일환경이 변화에 대응하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즉 냉전의 종식, 남북한간의 국력변화, 한국의 통일추진 능력향상 등은 중요한 통일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통일을 가시권으로 들여놓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통일에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 북한은 중국의 개혁정책에는 못미처도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위한 방편을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며 국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물러나가는 기에 따라 대화와 교류나 아니며 종전의 냉전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통일추진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냉전의 장기와가 다른 안보 불감증과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 갈 신세대의 새로운 통일안보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통일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고수전략이 가져 올 긴장과 대결 국면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통일교육의 방향이 분명치 않고 교육내용에 대한 적정성문제가 제기되어, 이

로 인해 담당교사들이 확신과 신념을 갖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겠다.

둘째,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가 강화되고 내용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이 학교급별로 계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차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 전문가의 양성에 주력하고, 지역에 통일학습센터를 건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 目 次

## 抄 錄

I. 序 論 .....	1
1. 研究의 目的과 内容 .....	1
2. 研究範圍 및 研究方法 .....	3
II. 統一環境의 變化 .....	5
1. 國際環境의 變化 .....	5
2. 北韓의 狀況 .....	13
3. 國內의 狀況 .....	16
III. 統一教育의 現況과 問題 .....	21
1. 國民學校 統一教育의 現況 .....	21
2. 統一教育의 問題點 .....	30
IV. 새로운 統一教育의 方向摸索 .....	33
1. 統一問題의 體制的 接近 .....	32
2. 獨逸統一과 教育 .....	40
3. 效果的인 統一教育을 위한 課題 .....	47
V. 結 論 .....	52
參考文獻 .....	55
Summary .....	58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과 內容

이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이다. 통일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둘째 목적이다. 즉, 가시권의 영역으로 들어온 통일의 현실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 통일체계를 수립해 보려는 것이다.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즉 냉전의 종식, 남북한 간의 국력변화, 통일인식의 변화에 따른 한국이 통일추진능력 향상 등 중요한 통일환경 변화로 이제 통일은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탈냉전과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체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커다란 남북한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간에는 이미 부분적인 대화와 교류의 길이 트여 있는 상태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현안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대화와 교류가 보다 급진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러 가지 징후로 보아 향후 10~20년 간은 한반도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내부 정치사정이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고 남북한이 오랫동안 익숙해 온 체제적 타성 때문에 통일이 단시간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것이라는 데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변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크게 세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의 통일 성취 능력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제환경이다.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환경이 조성되면 아무리 남북한이 통일을 원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사회 각 분야이 통일준비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주도

할 주체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교육분야에서의 통일준비 또한 매우 큰 비중을 지닌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체제의 수립에는 무엇보다도 통일이 민족의 발전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우선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분단직후 통일은 곧 '분단 이전의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했으며, 통일의 당위는 분단고통이 해소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사회로 굳어져 버린 현상태에서는 단순한 국가통합이 아니라, 한민족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민족사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른바 통일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한다. 즉,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의 만남을 내다보고 통일을 설계해야 하며, 북한주민과의 관계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은 '자유·민주·복지가 보장되는 발전된 민족국가'건설의 도정에서 중간에 거쳐 가야 할 하나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이 균형된 발전의 바탕을 확립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통일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과 분단에 따른 각종 비용의 절감, 그리고 각종 제약요인이 해소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한민족에게 가져다 주게됨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편, 통일이 포기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라고 해서 어떤 통일이든 성급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통일은 한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사회를 가장 바람직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이 민족이 회생을 되도록 줄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면, 가능성에서나 그 합리적 목적성에서 장기공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민족의 회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또한 비민주적인 통일국가의 출현도 거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전쟁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공존체제를 굳히고 점진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 분단의 고통

을 줄여 가면서 북한체제의 민주화 시기를 기다려 정치통합을 시도하는 길밖에는 있을 수 없다.

이 외에도 통일대비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은 누가 이루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민족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분단은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통일은 한민족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한민족 모두가 동의하는 자주통일의 원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선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통일의 원칙은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는 새 시대에 와서는 움직일 수 없는 통일원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 고른 복지, 균등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은 추구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통일된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는 통일된 사회가 아니며,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폄박하는 사회도 통일된 사회가 아님을 인식시켜, 민족사회구성원 모두의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할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과 이에 따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의 변모를 비롯, 통일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제환경은 물론 북한내부의 사정 그리고 한국의 상황 등, 통일촉진요인과 통일억제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5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현재의 통일교육현황과 점진적으로 실시될 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부분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통일의 성취와 이를 향한 <통일한국의 관리>에 대해 정리를 했으며, 독일의 통일대비교육과 통일후의 교육적과제를 고찰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목표와 내용을 학교 교육에 한정하여 재구성하여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했다.

연구방법은 실제조사보다는 주로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분석적 연구를 시도했다.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통일환경이 변화와 이에 따른 통일의 의지와 현재의 통일교육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독일의 통일대비교육과 통일 후의 과제에 대한 비교관찰을 통해 우리 통일교육의 새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Ⅱ. 統一環境의 變化

### 1. 國際環境의 變化

#### 가. 냉전체제의 종식과 통일문제의 한국화

냉전체제의 특성상 냉전의 종식없이 남북분단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과 진영내 국가간의 자동결속 등으로 나타나는 국제질서로서의 냉전체제의 구조적 특색으로 인해, 어떤 나라도 진영구분선을 넘는 국가간 협력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특별한 외교적 노력없이 반대진영 국가와의 투쟁에서는 같은 진영 종주국의 자동적인 지원을 받았다.

분단부터 냉전구조에 편입되어 왔던 남북한은 이러한 질서작동 원리를 그대로 상호관계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호간 협조는 불가능했고 그 대신 남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자동적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이란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유럽 세계도처에는 동서냉전의 종식을 예고하는 고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sup>1)</sup> 이 시기의 국제정세,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통일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통일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탈냉전의 국제정세의 흐름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개혁과 개방추세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기초한 소련에서의 개혁과 개방의 진전은 동구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레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1985년부터 스스로 체제개혁을 시작했다. 70여년을 고수해오던 레닌주의를 버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체제도 포기했다. 획일적 일당체제를 청산하고 다원주의 다당정치체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경제에서도 국가통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율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에 의한

1) 김덕중(1992), "국제환경변동과 통일과정", 한국정치학회 주최,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p. 653

시민통제도 완화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강력하게 고수해 오던 공산진영 국가에 대한 통제를 풀어버리고 외교에 있어서 이념적 차이의 벽을 헐어버렸다.

소련의 변신으로 냉전체제는 급속히 와해되었다. 동유럽 공산국가 대부분이 레닌주의 체제를 포기했으며 유럽에서는 동서진영 간의 대결이 완전히 종식되었다. 독일은 통일되었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반공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미·소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중·소간에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며, 유럽에서는 오랜 군비경쟁을 끝내고 군비감축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었다.<sup>2)</sup> 이러한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분단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 통일을 막아오던 최대의 국제적 제약을 풀어주었다.

무엇보다 먼저 소련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 종식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한국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즉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민족에게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남북한 관계가 국제적 냉전구조에 연계되어 있는 동안 통일문제는 냉전 주도국의 냉전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분단 극복 노력을 주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냉전종결로 인하여 이러한 제약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강대국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오직 국익 차원에서 남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동서화해와 공산권의 개방, 개혁 등 세계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바람직한 통일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에서 냉전후유증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동맹국이던 소련(현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두 강대국의 동의를 얻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도 성공했다. 한국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책임과 주도로 다룰 수 있는 ‘한국문제의 한국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것은 한국주도의 통일노력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 준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련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이 미친 영향으로써 한국국민들에게 자국체제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 준 것을 들 수 있다. 소련을 비롯한 레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

2) 상계논문, p.654

괴를 보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세계사적 조류의 본류임을 확인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인식 변화를 가져온 레닌주의 체제의 붕괴는 한국국민의 통일열의를 높여 주었으며, 통일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확실한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북한 체제는 속명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나아가서 그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하겠다는 결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 국민의 자신감과 결의는 한국이 통일과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사명 의식이 정부의 적극적 통일정책 전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소련에서의 레닌주의 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는 북한의 동맹체제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sup>3)</sup> 북한은 그동안 소련 및 중국과 군사동맹을 구축해 왔다. 북한은 남한 해방이라는 그들이 통일정책 전개에 있어서 이들 두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그러한 동맹체제는 북한에게 자신감을 줌으로써 경직된 대남정책을 고수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개혁과 냉전포기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의 일환으로 구축해 왔던 동맹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북한은 남반부에서의 공산 혁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동맹체제의 작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단독으로 혁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동맹체제 해체는 남북한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북한은 무력에 의한 남반부 해방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한국과의 공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은 한국의 통일정책 전개에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상에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정세는 한반도 통일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놓고 있다.

#### 나.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통일

냉전 이후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는 3가지 흐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sup>4)</sup>

3) 이상우(1993), "북한의 개방화와 통일전망", 서강대 동아연구소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pp.4~5

4) 민족통일연구원(1993),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3~1994", 민족통일연구원, pp.9~12

첫째,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노력이다.

2차 대전 후 국제 무역질서는 GATT, IMF 제도에 바탕을 둔 미국 중심의 다자간, 무차별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 무역질서가 70·80년대에 들어와 선진제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로 인한 주요 국가간의 국제수지 불균형심화로 인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제국은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였고, 지역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국가들간에 관세동맹 등의 지역주의(EC, NAFTA)를 형성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선 이러한 반자유 무역주의가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필요성이 절감되었고 이것이 와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무역질서의 재정립을 위한 UR협상에 이르게 되었다.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저지하고자 미국을 포함한 북미국가들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제 5차회의를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아·태지역의 개방적 무역체제 발전노력에 합의했다. 아·태경제협력체는 아·태지역 최초의 지도자회의를 통하여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1994년 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태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심화시켰다.

또한 관세무역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제 7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를 타결시켰다.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은 공산품분야의 관세인하에 치중되었으나, GATT회원국들은 서비스 및 농수산물분야까지 포함하는 모든 교역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GATT회원국들은 법적구속력과 분쟁해결기구가 완비된 세계 무역기구(WTO)를 1995년에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확대, 국제무역체제의 강화와 개선(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신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의해 UR협상이 주도되었다는 점은 향후 세계정세가 미국과 유럽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정치에서 경제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유럽공동체

(EC)는 유럽단일시장 출범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등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향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유럽공동체는 기존 회원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와 함께 유럽통합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준함으로써 북미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시대로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공동특혜관세(CEPT)제도를 통하여 2008년까지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에 따라 동북아에서도 지역경제협력체 형성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국가간 상이한 정치,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또한 동북아 지역국들의 최대시장인 미국과 역내국가들이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블럭화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동북아에서 유럽공동체나 북미자유무역지대와 같은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APEC을 중심으로 역내국가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APEC 내에서의 [무역·투자위원회]창설합의 등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 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는 유럽공동체가 지역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아·태지역경제의 중요성 증대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 및 협력이 대서양권의 경제활동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아·태지역은 1992년 기준 세계 전체 GNP의 약 52%, 교역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은 선진경제권의 양대축인 미국과 일본 및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국을 포함하고 있어 2000년대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축 이동은 아·태지역 구성국가들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급증하는 상호의존도 관리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내국가들은

광범위한 형태의 아·태경제협력체와 더불어 동남아국가연합과 북미자유무역연합 또는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등 소지역적 차원의 기구를 발전시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태 및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증대추세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sup>5)</sup>

#### 다.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통일예멘의 분열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90년 냉전분단국으로 남아 있던 독일과 예멘이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룩함에 따라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냉전분단국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같은 분단국으로 고통을 겪어 온 우리는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통일방식에 있어서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일식 통일과 예멘식 통일에 있어서의 특징과 통일 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한다.

1993년 10월 3일로 독일은 통일된 지 3년째가 되었다. 통일유형에 있어서 흡수 통일이 라 평가되고 있는 독일통일 과정상의 특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sup>6)</sup>

독일식 통일의 특징은 우선 국민의사에 의한 통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인사회주의도형 통일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과정에서 제도적인 boundary, 즉 72년도 기본관계조약, 그 이전에 있었던 통행협정, 이런 형태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서독과 동독의 민간부문이었다. 수없는 자매결연, 교류 같은 것들이 통일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실제로 독일통일을 보며 독일은 통일조약이 없다는 말들을 한다. 72년도 기본관계조약도 통일관계조약이라기 보다는 공정 관계를 형성하는 공정조약이었다. 이에 대해 분단고착화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5) 상계서 p.3.

6) 민족통일연구원(1994), 「예멘통일의 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pp.74~75.

그런 만큼 독일이 국가주도적으로 통일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나갔던 측면은 없다. 그렇게 분단고착화 정책의 산물로 평가되던 기능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동서독의 대화와 교류방식이 결국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주도형의 통일논의 과정은 이를테면 시민사회 자정능력을 통해서 국가영역에서의 갈등을 자율적으로 흡수하고 통제하면서 통일에 따른 후유증들을 폭발적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욕구가 그대로 정치권으로 반영이 되면서 급격히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일후유증은 크다.<sup>7)</sup> 이미 통일 초부터 예상했던 대로 동독지역에서는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 증가, 서독지역에서는 세금의 부담증가와 자본과 노동시장의 혼란 등이 나타났고, 또 과거 동독비밀경찰 슈타시(Stasi)의 비밀 문서공개로 시작된 사회문제와 국영기업이 사유화로 비롯된 문제들, 동독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들, 동독 젊은이들의 네오나치 운동과 외국인 습격 문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들로부터 물려드는 망명신청자들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독사람들의 의식차이 문제들 때문에 통일독일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 후 나타난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통일후유증]이라고 부르며, 참다운 통일이란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서독인들의 수준까지 올라가 의식의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며 그 때까지는 상당한 [통일비용]이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서독이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 1990년 5월 22일 예멘통일이 선포되었다.<sup>8)</sup> 예멘통일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선 예멘통일은 평화통일이다. 둘째, 상처됐던 정치세력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다. 셋째, 그 통일 방식은 협상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결과를 1對1 즉, 균등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통일방식이다. 예멘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에 의한 합의통일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논의 유형은 국가주도형 통일로 볼 수 있다.<sup>9)</sup> 예멘통일의 전과정을 예멘의

7) 정용길(1993), "통일독일의 현장 경험 사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후유증 극복방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64.

8) 민족통일연구원(1994), 「예멘통일의 문제점」, 전계서, p.5.

9) 상계서, pp.75~76.



양측정부가 주도했고, 민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었다. 통일되는 방식도 경제·사회통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정치통합, 국가통합으로 이어지지만, 예멘의 경우는 양측지도부가 국가통합, 정치통합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도기간 속에서 경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후유증은 적을 수 있으나, 그것이 국가주도형의, 정치주도형의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가영역에 있어서의 갈등을 시민사회가 통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 갈등은 곧 바로 폭발적인 지금과 같은 내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엄청난 민족적인 재앙을 낳게 된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양측의 기득권층이 서둘러 선포한 예멘의 통일은 남북이 군대를 유지하면서 형식적 평등완리에 입각하여 정치권력을 안배하였기 때문에 통일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한 정치적 폭력을 규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예멘의 합의통일은 무력대결로 귀착하게 되었으며 통일을 선포할 당시 낙관적 기대에 부풀어 있던 예멘의 현사태는 상호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내전의 불씨를 묻어둔 채 합의 서만을 통해 서둘러 이룩한 통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의 흡수통일과 예멘의 합의통일은 많은 후유증을 나타내며 우리의 통일방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멘의 통일방식과 독일의 통일방식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멘과 독일의 통일방식과는 접근방식이나 이해방법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는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틀과 통일과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담당해 가고,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자율적인 통합의 주체들은 민간이 해나가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 하며 통일 후에 나타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통일에 대한 대비작업을 해야 한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서로의 실리를 찾고, 그러한 가운데 신뢰를 쌓아 공존의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정치·군사적인 분야의 접촉을 피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택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 2. 北韓의 狀況

### 가. 국제적 고립과 국제혁명 역량의 약화

소련에서의 레닌주의 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정세에 있어 북한을 하나의 고립된 상대로 만들었다.<sup>10)</sup> 동구사회주의권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이념적 성격을 전향하고 또한 독일통일 실현, 소련연방의 붕괴와 러시아의 등장 등으로 그 동안 이념적으로 같이 했던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뜻을 달리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고립상태를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소련, 중국과 군사동맹을 구축해 왔다. 북한은 남한해방이라는 그들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이들 두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개혁과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전개의 일환으로 구축해 오던 동맹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을 추진하는 데 동맹체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국제혁명 역량강화라는 정책노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나.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위기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 한국보다 더 우월한 경제역량을 가져왔다.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북한은 강력한 동원정치체제를 가동하여 지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성취했었다. 그러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업화 성숙단계에 이르러 북한체제의 성장은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계획의 잘못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체제는 붕괴의 길로 들어 섰다.<sup>11)</sup>

10) 이상우, 전계논문, p.4.

11) 민족통일연구원(1993), 전계서, pp.49~67.

1990년대에 와서는 북한 경제는 -3.7% 성장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지난 해 -4.3% 경제 성장을 기록하여 지난 90년 이후 4년간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였다.

###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연 평균
3.3	3.0	2.4	-3.7	-5.2	-7.6	-1.3

출처 : 통일원 [북한 경제 종합평가] (서울 : 통일원, 각년도) ; 한국은행, [1991년 북한 GNP 추정경결과] (서울 : 한국은행 1992년) ; 한국은행, [1992년 북한 GNP 추정결과] (서울 : 한국은행 1993).

한국은행은 지난 해 북한의 경상 GNP(달러기준)는 지난 92년보다 6억 달러 줄어든 2백 5억 달러 1인당 GNP는 39달러 줄어든 9백4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남한간의 경상 GNP 규모 비율은 92년 1대 4.5에서 93년 1대 16으로 1인당 GNP 비율은 92년 7.4에서 8.3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북한의 대외거래는 그동안 무역의존도가 컸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위축돼 26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북한 경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대외경제 여건악화에다 에너지 공급 애로, 사회간접 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경제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의 붕괴 核문제 등으로 대외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생산이 부진한데다 특히 이상 저온으로 곡물생산이 급감했다.

농업비중이 큰 미곡생산이 냉해로 전년보다 13.9% 감소한 것을 비롯, 농림어업생산이 7.6%가 감소함으로써 식량난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생산 역시 석탄생산감소와 용수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어 전년대비 10.4% 감소했다.<sup>12)</sup>

이것이 에너지 공급난으로 작용, 생산 및 수송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유 공급까지 원활하지 않고 사회간접시설까지 미비해 북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12) 「한국경제신문」, 1994년 6월 11일자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산업구조적으로 빠른 시일내 경제난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동구권 국가와 상호원조적인 경제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북한이 이들 국가의 개방경제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성장 활력소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재 부족현상까지 겹쳐 건설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서비스부문 생산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채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2년도에 97억1천 달러에 머물렀던 외채가 지난해는 1백3억2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56억2천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아직까지 높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여기에 소련과 중국의 경제 지원이 급속히 감소하는 악조건이 겹쳐 수년내 재기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지도 모르며 결국 경제위기는 체제를 위협할 단계로까지 악화되어가고 있다.

#### 다. 핵무장과 전쟁

북한 핵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투명성 여부를 밝히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마지막 노력을 북한이 사실상 좌절시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길에 들어서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기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처럼 핵무기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임하는가? 그 이유는 북한은 어떤 희생을 부릅쓰고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기 때문이다.<sup>13)</sup>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은 북한정권이 붕괴의 위기에 접근해 가고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에게 핵무기는 확실한 [생명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정한 기간 북한의 국제

13) 김학준(1994), "북한핵과 동북아시아", 「제민일보」, 1994년 6월 7일자.

적 위상은 높아지고,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든 것이야말로 주체사상이 승리라고 선전하는 한편 핵무기가 주는 심리적인 긴장감을 사회 전체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그것을 협상카드로 활용해 실의 확보에 그들의 의지를 노정시킬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음이 확실해질 때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때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경색될 것이다.<sup>14)</sup> 대외 국면보다 대결 국면이 지배적 상황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또한 한반도 상황만 경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역시 핵국가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이 핵국가가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핵국가들로 가득차게 되며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름을 굳히게 되며 긴장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아시아 전체로 볼 때나 동북아시아로 좁혀 볼 때나, 그리고 한반도만을 놓고 볼 때나 우리는 자연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 유엔 제재나 한-미-일 3개국 등의 다국적 제재가 논의돼 북한 핵문제가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재 국면에 들어섰으며, 북한은 제재를 할 경우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다.

### 3. 國內의 狀況

#### 가. 통일추진능력의 향상

현재 한국의 통일 추진 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산업능력 기반은 이미 갖추었으며 초보적인 기술자립 능력도 갖추어 가고 있어 통일을 위한 경제적 체제능력은 수년 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화 작업의 성공적 전개로 정치적 안정을

---

14) 상계논문

구축할 수 있어 한국은 남북통일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한미안보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한일협력관계의 강화,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통일의 국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향후 수년 간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입장에서도 통일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통일의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민족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통일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한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 이념을 국민적 기본규범으로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한 경제 체제에서도 한국은 점차 경제에서 공공영역을 넓혀 북한체제와의 상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정신에 기반한 과감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또한 문화적 정통성유지가 통일의 근본적인 기초확립 작업임을 깨달아 문화통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바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즉 자유민주체제의 확립, 복지사회 건설, 그리고 문화 정통성의 확립 등이 반드시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 나. 신세계의 통일관

6.25 44 주년을 맞는 현재, 한국사회는 확연히 차별성을 드러내는 2개의 世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25世代'와 '포스트 6.25世代'가 곧 그것이다. 전자가 6.25를 직접 체험한 세대라면, 후자는 6.25를 들어서 알거나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세대다. 이 2 세대의 6.25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그 내용이 같을 수 없고, 평가가 같을 수 없고, 強度가 같을 수 없다.

그러면 '포스트 6.25세대', 그 중에서도 핵심부를 이루는 20대와 30대 신세계가 6.25가 재발할 경우 6.25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논단은 6.25

44주년을 맞아 신세대 직장인 의식조사를 실시했다.<sup>15)</sup>

이 조사의 특징은 '포스트 6.25세대' 중에서도 특히 11대 유력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신세대 직장인을 샘플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포스트 6.25세대' 중에서도 '가장 온건한 사람' '가장 적응력이 강한 사람' 혹은 '기존 사회의 규범에 가장 잘 통합되어 있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sup>16)</sup>

첫째, '누가 6.25를 일으켰는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7백99명 중 5백4명(63.1%)이 '김일성', 1백 58명(19.8%)이 '소련'이라고 각각 답해 전체 응답자의 82.9%가 '김일성과 소련에 의해 6.25가 발발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 보수계층의 염려와는 달리 젊은 직장인 대부분은 정통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 다시 6.25가 일어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어난다 및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47.4%)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47.2%)의 비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왔다. 6.25가 끝난 지 44년이 되는 지금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질은 안개 속'을 더듬는 상황이 돼 있다. 이 半半의 비율은 그 '안개속 상황'이 이 신세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6.25가 재발한다면 무엇이 재발하도록 하느냐'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다 가장 많은 수(45.9%)가 그 원인을 두고 있지만, 전쟁은 '통일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33.6%)도 적지 않다.

이는 평화 통일이라든지 흡수 통일이라는 것을 그만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북한을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독일보다는 예멘통일의 예에 더 많이 자극을 받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넷째, '北美간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이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공존은 하되 통일이 안된다는 대답이 압도적(65%)이다.

다섯째, 핵 문제를 둘러싼 세계의 대응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이에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우유부단하다.'는 대답이 48.8%로 나타나 직장인 2명중 1명은 북핵문제에 대

15) 「한국논단」, 94년 6월호, PP.20-26.

16) 송복, "포스트 6.25세대의 전쟁관", 상계서, PP.27-35.

응해 온 정부당국의 자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섯째, '북한의 핵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이다. 역시 '인내심 있는 대화'가 다수(57.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핵문제 대응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한 것과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일곱째, '남북간에 전쟁이 재발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이다. 이에 '나가 싸운다.'(39.7%)와 '정부 방침에 따른다.'(20.0%)에 집중되어 있다. 두 대답을 합치면 거의 60%가량이 '긍정적으로' 혹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여덟째, '전쟁이 재발하면 어떤 결과가 되라라고 보느냐'이다.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과피 속에서의 남한 주도통일'(53.3%)과 '강대국들의 재배'(34.9%)이다. '남한주도 통일'에 '승공 통일'(5.9%)을 합쳐서 본다면 약 60% 정도가 남한 주도 통일로 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지배'를 3분의 1이상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그만큼 복잡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바깥의 변수가 우리의 운명에 그만큼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된다.

아홉째, '전쟁이 나면 가족, 국가, 통일 중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느냐'이다. 이에 '가족'이라고 답한 사람(67.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가와 사회체제' 또는 '조국의 통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0%, 16.1%에 그쳐 '가족을 중시'하는 신세대들의 의식변화를 엿보게 했다.

#### 다. 안보 불감증

북한에 NTP 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감으로써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 되고 북한측이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대응해 올 경우 우리는 [제2의 한국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전쟁이 나는 건지 안나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급박한 정세 앞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위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설마 전쟁까지야 가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고 휴일에는 가족 나들이를 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국민 일



상의 어느 구석에서도 위기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보 불안 중]이니 태평 무드니 해가지고 남을 탓하거나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한다.<sup>17)</sup>

위와 같은 현상은 신세대 직장인(11대 기업)의 의식조사의 결과로도 들어난다.

'제2의 6.25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2%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답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답한 사람(6.5%)보다 7배나 많았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답한 사람도 40.9%나 돼 북핵문제와 '서울 불바다'발언 등 최근의 한반도 긴장고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18.1%)와 '핵에 관계없이 미국이 북한을 승인해야 한다.'(14.0%)는 대답도 적지 않아 젊은 직장인들이 3사람 중 1명꼴로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sup>18)</sup>

이렇듯이 지금 우리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한데 뭉쳐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흑자는 이렇게 말할는지 모른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우리 편이 되고 국력 또한 우리가 우월하니 오히려 통일이 빨리 될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하고 통일을 이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기쁨을 주며, 또한 국제사회가 언제나 우리 편일 수는 없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힘으로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었을 때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입지는 강화되고 그 정책의지는 보다 용이하게 관철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민족번영과 통일을 위해서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갖춘 후 북과의 협상에 임할 때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다. 국민 각자의 안보의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이며 각기 조용한 실천을 대망할 때라고 생각한다.

17) 「조선일보」, 1994년 6월 9일자.

18) 「한국논단」, 전계서. P.22.

### Ⅲ. 統一教育의 現況과 問題

#### 1. 國民學校 統一教育의 現況(제 5,6차 教育과정을 중심으로)

##### 가.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교과목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단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와 통일이라는 과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자세를 모색하는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있는 통일안목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국민학교의 통일교육을 주로 바른생활과 도덕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교과목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며 국민으로서의 공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참여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태도를 지닌다.
- 2) 국토분단의 현실과 북한공산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며 대한민국의 전통성 및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 나. 내 용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전반적인 여건을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하여 왔다.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도 그 시대가 처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기복을 그리면서 다양한 모습의 통일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통일이 중요한 민족적 과제인 만큼 통일과 관련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다.

국가 통일정책은 결국 통일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통일정책의 방향을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분단 이래 '60년대 말까지 우리의 통일접근 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명분을 내세운 소극적 통일접근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1960년대까지는 학교교육에서도 북한을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적개심 고취에 주안을 두어 지도하여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북한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책전환과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정책기조 위에서 평화통일정책을 펴고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반공교육은 강화되고 북한통일정책의 비판적 우리의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에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 같이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로 규정하고, 관계개선에 노력한 결과 남북한 예술단, 남북한 고향방문단 교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남북한 대결구조가 화해 구조로 전환되자 학교교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그동안 반공교육이라 불려오던 호칭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바꾸게 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경제발전, 적극적인 북방외교정책,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눈부시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고·독일이 통일되는 등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통일교육은 시대적 상황과 북한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변화를 국민학교 도덕교과서의 내용 변천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 국민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영역 변천과정<sup>19)</sup>

3 차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저학년〉 북한공산 집단의 그릇됨을 알 과 나라를 지켜주는 분들에 대하여 감사 혼 마음 갖기.	〈3학년〉 북한주민의 생활상, 북한 공산당 의 도발, 자유생활의 금지	〈3학년〉 함께 살아 가야 할 우리민족, 우리 어린이들의 생 활과 북한 어린이들 의 생활, 6.25남침과 그 이후의 도발사례	〈3학년〉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 애쓴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기,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 의 필요성
〈중학년〉 북한공산 집단이 저지른 죄악 상과 북한동포의 참 상을 알고, 민주주의 좋은점 알기	〈4학년〉 북한 주민 의 억눌림, 북한공산 당의 전쟁준비, 남북 분단의 손실	〈4학년〉 남북주민생 활 비교, 국토수호에 애쓴사람, 통일을 해 야 하는 까닭	〈4학년〉 나라발전에 협력하는 자세, 민족 의 문화 유산을 아 끼고 사랑하는 마음, 조국 통일의 미래 모습
〈고학년〉 북한공산 집단의 죄악상을 알 고 평화통일을 이룩 하기 위한 결의	〈5학년〉 북한의 독 재정치, 북한 공산당 이 잔인성, 북한 동 포의 자유갈망	〈5학년〉 민족의 이 질화 문제, 나라의 안정과 우리생활, 평 화통일과 무력통일	〈5학년〉 국가와 개 인간의 관계, 해외동 포들의 생활과 그들 의 조국애, 평화통일 의 방법
	〈6학년〉 공산주의의 모순점과 북한의 민 족문화 말살현황, 평 화통일을 위한 노력	〈6학년〉 우리 체제 의 우월성과 북한체 제의 문제점, 자주국 방의 자세, 평화통일 의 자세	〈6학년〉 살기좋은 나라, 민족의 금지와 사명, 통일을 위한 노력, 세계평화와 인 류공영의길

위의 표에서 국민학교 도덕교과서 내용의 변천과정을 보면 4차 교육과정까지는 북한 공

19)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 1993, pp.16~17.

산당의 좌악상, 잔인성, 전쟁준비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어 대립과 적대의식이 교육내용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당위성, 민족의 이질화문제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대립과 적대의식보다는 평화통일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념적 대립에 의한 분단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5차 교육과정에서도 남북한의 체제를 상호비교하는 내용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 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5차 교육과정에 의거 만들어진 교과서에 있어 통일·안보영역에 대한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다.<sup>20)</sup>

표1에 의거 현행 실시되고 있는 5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체제 이념

국가체제이념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제 4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대한 이념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이를 통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인지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는 점이다.

##### (2) 체제유지방안

체제유지 방안의 골격은 제4차 교육과정과 같이 민족적 긍지, 문화발전, 전통계승, 국가애, 국토애, 국가발전은 위한 노력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문화교류, 인류애를 통한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에서 헌신할 것과 상호신뢰로써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력신장과 국방

20) 고대만(1990), "국민학교 도덕과 교과서 통일·안보영역의 내용분석", 「도덕 국민윤리와 교육」 제1호, p.70.

력의 신장도 국가체제 유지의 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 (3) 국방안보의 대상 및 방법

국방안보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국력 및 국방력 신장에 두고 있다.

### (4) 북한사회 인식

북한사회의 인식은 단순한 감정적인 비판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학교의 학습내용이 김일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전쟁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정체학습의 내용도 김일성 우상화, 통제적, 허위선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사회는 억압, 통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언론통제, 여행의 제한, 정보단절과 왜곡,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폐쇄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없고 식량사정도 매우 나쁜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 (5) 공산주의 비판

일반적인 의미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고 단지 북한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해치고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공산당의 만행은 5학년의 한 제재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 (6) 분단의 이유와 6·25에 대한 인식

분단의 이유를 북한의 남침에 두고 있으며, 남침의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로써 6·25는 북한공산집단의 무모한 욕심에 의해 저질러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묘사되고 있다. 6·25에 대한 남한의 대응 논리는 나라를 위한 싸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대응으로 정의되고 있다.

(7) 통 일

남북관계 및 분단의 문제점 : 지금까지 적대관계였던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동일문화, 동일역사를 강조하고 있으나,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질화되어 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상호대립과 경쟁을 피하고 화합함으로써 이질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문제점은 이산가족의 고통, 자유왕래의 불가능성을 들고 있다.

통일의 개념 및 방법 : 통일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데, 먼저 통일의 대원칙을 평화통일에 두고, 화합, 자유왕래, 물자교류, 상호방문, 서신교환, 지속적인 남북대화, 미워하는 마음 없애기, 이해하고 사랑하기, 상호신뢰, 전쟁억제, 상호양보, 형제애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부터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도덕과에서는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여 주당 2시간에서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일, 안보영역 시간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안보생활은 국가생활에 통합하였으며, 통일 이후의 공동체 삶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명칭을 '국가, 민족생활'로 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통일관련 영역을 내용 분석하면 다음 표2와 같다.

〈도표2〉 6차 교육과정의 통일관련 내용분석

학년 영역	주요 지도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가	국가애 민족애	가. 나라사랑 나. 조상의 뜻 이어 받기	가. 나라발전에 협력하기 나. 민족문화유산 아끼기	가. 국가와 개인 나. 해외동포들의 조국애	가. 살기좋은 나라 나. 민족의 긍지와 사명
민족	통일	다. 분단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다.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다. 평화통일의 방법	다. 통일을 위한 노력
생활	국제우호 인류애	라. 외국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라. 세계평화에 공헌한 사람들	라. 국제문화 교류	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제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함양,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의 정체성,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 1)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련된 내용

민주시민의 자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민주적 절차와 과정,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이 지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규범등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민주 시민의 함양교육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기본방향이나 과정 등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방법과 절차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국민학교에서는 인간 존중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민주적인 생활태도와 기본습관을 내면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인간의 입장과 견해의 조정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 2) 민족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민족공동체 교육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의 재확인을 통해, 남과 북에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서로가 관용, 화합,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여 앞으로 이룩해 나갈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하고,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전망과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국민학교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더불어 살아온 한 겨레로서의 공동체 의식, 분단의 이해 및 현실의 이해, 분단으로 인한 공통과 제반피해에 대한 인식, 7천만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통일에 중점을 둔다.

#### 3)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는 통일국가의 실현 과정, 국제사회에서의 통일국가의 역할과 위상, 통일국가의 미래상,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과 새 통일국가의 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의식 등을 지도한다. 아울러 통일조국에서 겪게 될 대외적인 혼란과 시련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학교에서는 통일의 방법, 평화통일의 조건, 안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 인구, 국통, 자원 등 새 통일국가의 모습 등을 지도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1,2학년의 경우에 국기,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애국선열에 감사하기, 국가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그에 대한 염원을 가지는 것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3,4학년의 경우에는 분단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절감, 통일조국의 미래모습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5,6학년의 경우에는 평화통일 방법,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의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내용을 5차 교육과정 분석을 가지고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3〉 5차 교육과정 분석틀에서 본 6차 교육과정

영역	주제·영역	학년				비율
		3	4	5	6	
남북 분단의 인식	1. 한 겨레의 인식	가나다	가나다	나다	가나다	
	2.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의 심화	다				
북한 체제의 이해와 비판	1. 북한의 정치					
	2. 북한의 경제					
	3. 북한의 가정					
	4. 북한의 교육					
	5. 북한의 사회문화					
	6. 공산권의 변화					
	7. 북한 공산당의 기만성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	1. 호국의지	가나다	가나	가나	나	
	2. 안보의 중요성	가나	가	가	나	
	3. 북한공산당의 도발 행위					

	4. 북한 공산당의 적화 야욕					
통일의 신념 과 태도	1. 통일의 염원	다	다	나다	가나다라	
	2. 통일의 필요성	다	다	나다	가나다라	
	3. 통일을 위한 노력	다	다	나다	가나다라	
	4. 평화적 통일의 중요성	다	다	나다	가나다라	

〈표3〉에서 보듯이 6차 교육과정의 통일관련 내용은 이전과는 달리 통일에 관한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보에 관한 내용이 축소되어 있다. 5차 교육과정의 경우도 4차 교육과정에 비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내용이 대폭 줄었다.

또한 북한 공산당이 대남 도발행위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고 공산화전략과 전술에 대한 해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는데 6차 교육과정의 경우도 보완하기는 커녕 북한 관련부분(실상 및 공산화 책동)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지난 날의 반공일변도 교육이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긴 하나 북한 공산당은 분명 남한을 공산화 하려는 위협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교육내용에 반영해야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통일환경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의 남북한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야기되는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앞서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안보의식의 공양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 2. 統一教育의 問題點

통일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 하면서 1980년대 초반까지 반공교육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반공일변도인 우리의 통일교육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군사정권 아래서는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식에도 전환을 촉구하게 되어 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

의 의지와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그것은 제 5차 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채택하게 하였다. 즉 현행교육과정의 통일안보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언젠가는 통일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할 동족으로서의 북한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코자 하였다.<sup>21)</sup> 그러나 현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통일교육 지원관리체계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sup>22)</sup>

그리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함으로써 기대하는 민족적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상에는 교과교육으로서 통일교육과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교육의 강조가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교육의 현장속에서 도덕교과 이외의 시간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교육체제의 비과학성, 교육자료의 비효율성, 관점적 교육<sup>23)</sup>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국민학교부터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단편적이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정책, 학사행정당국의 이해와 협조부족, 연구비와 자료지원의 비연속성, 대중의 무관심, 전후세대의 급증, 사상적 유동, 민간 및 재계인사들의 이해부족과 무지, 불신 풍조, 북한의 심리적 강화, 풍요로 인한 안일한 사고추진 등을 들 수 있다.<sup>24)</sup>

2)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한데다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같은 주제가 단순 반복되고 있다. 또 최근의 통일관련 매스컴자료에 비해 훨씬 진부하다.

북한을 과장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방식을 부정적

21) 교육부(1993), 「통일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89호, p.14.

22) 박점춘(1992),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민족통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 : 제주교육대학원), p.49.

23) 김호길(1988), “국제화시대의 통일교육과 이념교육”, 부산의국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논총」, p.195.

24) 상계서 p.159.

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 그리고 현시대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한다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3) 종래의 학교교육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산주의의 비판이라기보다 남침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적개심 고취와 단편적인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반공교육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경험주의적이고 감상주의적이며 주관적인 입장에서 반공교육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는 동기유발과 흥미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 사고와 형식적 사고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거부감까지 일으켜 그 수용도가 낮음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길러주지 못할 뿐 아니라 편향적인 사고방식과 아울러 조국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판적 인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많다. 제 4, 5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인지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 내지 적개심을 강조하는 한편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방식, 논의절차,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적 안목의 육성에는 소홀히 하여 오고 있다.

4)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통일교육 담당교사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사고구조가 기존의 반공교육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교사 스스로가 이상으로서의 통일조국과 현실의 남북한 분단상황의 차이가 극복될 수 없다는 통일비관론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사의 통일문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이다.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종래의 통일교육 자료는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 전달차원의 단편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 많았다. 또한 북한관련 간행물이나 통일문제 연구서적의 경우 필자와 정보부족 때문에 교사로 하여금 북한관련 정보와 지식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관심밖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은 통일교육의 현장에서도 핵심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에 관한 교수전략의 구사 기술이나 자료활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는 통일관련 내용에 관한 전문 훈련을 받은 교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IV. 새로운 統一教育의 方向摸索

### 1. 統一問題의 體制的 接近<sup>25)</sup>

#### 가.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

##### 1) 통일의 의미

한민족의 미래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민족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한민족 사회는 민족사회성원 개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기본단위이다. 민족사회는 사회성원 모두가 자기의 연장으로 여기는 동류집단이며 의식차원에서 나의 연장으로 여기는 <우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구성체이다. 민족사회를 모두가 자유롭고,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는 민주공동체로, 그리고 다함께 복지를 누리는 공존공영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에 남한에 살고 있는 민족사회성원들은 북한 있는 2천만 동포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동포애는 민족통일을 정감적 차원에서 민족사회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있다. 한민족은 무엇보다도 번영하는 민족사회건설에 북한동포도 동참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족통일을 민족사회의 미래건설에 가장 중요한 선결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족통일은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를 하나로 다시 통합하는 일이다. 문화공동체로서의 한민족 사회의 동질성 및 <우리의식>을 회복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로 다시 묶는 것이다.

##### 2) 통일과제의 성격

한민족사회는 1945년 해방의 과정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에 의해 영토적으로 분할되었으며, 1948년 이념을 달리하는 두개의 정부가 남북한에 세워짐으로써 정치적으로

25) 이 부분은 이상우(1994),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21세기와 통일조국의 모색에 관한 학술세미나」(94. 5. 20)발표논문 pp.5~13에 크게 의존했음.

분단되었고, 다시 1950년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전쟁 발발로써 서로를 증오하는 민족분단을 겪게 되었다. 민족통일의 과제는 이러한 분단을 모두 극복하는 일이다. 남북한 간의 같은 민족성원으로서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키며,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묶고, 경제·사회체제를 통합하고, 영토적 분단을 극복하여 남북한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회복하는 일이 민족통일과제의 내용이다.

민족통일과제는 그 내용이 명백하나 통일한국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들은 다양하며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민족통일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분단 이전의 과거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설계의 하나로, 즉 창조적 과제로 되어야 한다.

#### 나. 어떤 통일을 추구해야 하나

통일은 자유·민주·복지가 보장되는 발전된 한민족 사회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하는 통일이라면 그것은 민족사회 발전목표와 조건으로서의 통일, 즉 목표와 조건을 뒤바꾸는 일이 된다. 어떤 통일한국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 1) 하나의 민족공동체

통일은 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을 말한다. 그리고 형식상이 아니라 실제로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체제로 작동하는 공동체속에서 남북한주민이 똑같은 구성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은 1민족 1국가 1체제의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

##### 2)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

통일한국의 정치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의 보장되는 정치질서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정치질서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원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의사를 모두 존중하는 만민평등의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의 이상이어야 한다.

### 3) 공존공영의 경제질서

통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복지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이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질서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통합된 민족공동체의 경제체제의 기본 형태는 <보완된 시장경제체제>로 설정해야 한다.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및 개방경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을 강화한 형태가 통합된 민족공동체의 경제체제·사회체제의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4) 평화국가

통일한국은 평화국가여야 하며 이웃나라와 우호선린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여야 한다. 통일한국은 이기적 만족주의를 내세우고 다른 민족을 억압착취하는 독선적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웃과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는 평화공존을 통일한국의 외교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사해동포 우호선린정책은 수천년 간 지녀온 우리민족의 기본적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 다. 통일로 가는 길은 어떤 단계를 거치나

국민적 합의로 세워 놓은 통일목표에 부합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남북한사회의 통합과정도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통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룬 후의 사회, 즉 통일한국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구상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1) 분단관리 단계 : 통일을 위한 내적 준비

가) 시민민주주의의 정착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정치질서는 민족공동체의 확립이다. 시민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고, 민주참여의 기회를 갖는 민주공동체로 만든다는 국가발전목표는 통일한국의 기본 정치구상이다.

남한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통일의 주체인 모든 국민을 통일의 주역으로 만듦으로써 통일추진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뿐만아니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동포의 통일열망을 환기시키는 통일정책이 된다. 역으로 남한에서 민주주의 정착에 실패하게 되면 남한은 통일을 주도하는 지위를 잃게 되며 통일의 명분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시민민주주의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확립은 국가발전 목표임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기초적 준비과업이 된다.

나) 경제운영의 기초확립

경제적으로도 통일한국의 경제운영을 위한 기초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1민족 1국가 1체제의 단일 민족공동체로 된다면 남북한의 경제도 단일체제로 통합되게 된다. 반세기동안 다른 경제체제 밑에서 차등발전을 지속해 온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는 엄청나다.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남북한경제력 격차를 해소할 투자능력을 미리 배양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경제체제를 남한의 경제체제와 상용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해 두어야 한다. 준비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국제환경 조성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우호적 협조 없이는 통일을 순탄하게 달성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축복을 받는 통일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사전에 이들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정유지해야 한다.

주변국의 국력과 한국의 국력과의 격차는 크며 그 간격은 쉽게 좁힐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변국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확보한다는 것이 통일의 선제조건이 된다. 즉 통일한국에 대하여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가 가질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해소하고, 통일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뚜렷하게 심음으로써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한반도 분단사태가 통일로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2) 통일과정의 관리단계 : 남북협조관계 구축 노력의 전개

통일과정은 분단현실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남북한 사회는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각 독립된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로운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 남북한은 1992년 2월에 공존합의를 〈기본합의서〉로 문서화했으나 북한은 아직 이를 전포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남북한이 단일 정치체제 속에 통합되는 정치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가) 상호신뢰구축

오랜 대결과 전쟁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불신은 깊어져 왔으며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보다 불신정도가 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 통일과정은 이 불신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불신이 지속되면 통일노력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남북한 간에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상대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즉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상호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는 통일 노력의 첫번째 과제이다. 이 구축의 첫단계로 우선 전쟁이 포기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서로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나) 공존합의의 제도화

서로가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장래를 논의할 때 통일된 국가형태가 합리적으로 규정되며 남북한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계획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논의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공존의 제도화이다.

남북한은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의 체제전복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공존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 합의를 실천할 제도를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존합의는 제도화를 통하여 객관화, 안정화된다. 공존관계가 안정되어야 이를 기초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및 체제통합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공존의 제도화는 상호주권의 존중,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평화 협정 및 앞으로의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불가침조약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른바 〈남북 기본합의서〉의 화해-불가침의 실증적 실천이다.

#### 다) 교류협력을 통한 체제상용성 제고노력

남북한간에 통행, 통신, 통상의 3통(三通)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면 남북한 간의 사회체제, 문화, 경제체제에서의 상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인적, 물적교류의 증대와 함께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간 단일화폐의 통용과 단일 경제관계법의 적용으로 양 지역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여 경제적 단일 국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이 더 진행되어 남북한 주민의 거주지 제한없이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면 경제통합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학습과정과 스스로의 체제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간에 체제상용성이 줄어들게 되며 동시에 생활환경의 동질화, 문화의 동질화, 의식의 동질화가 진행되면서 남북주민간에는 〈우리의식〉, 하나의 〈민족의식〉이 자리잡게 되어 민족통일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교류협력을 통한 체제상용성 제고노력은 평화롭고 혼란 없는 통일을 위해서는 불가결하다.

#### 라) 단일정치체제 구축

남북한간에 경계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형식상의 경계로 될 정도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정치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념의 통합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하나의 체제가 상이한, 그리고 상극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의 완성은 단일정치체제로의 통합을 이루어진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단일한 정치이념, 단일의 헌법, 단일의 법체계, 단일의 국민을 가지는 단일국가여야 한다.

#### 3) 통일한국의 관리 단계 :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준비단계

경제적·정치적 통합 및 사회 문화통합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완성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며 한민족공동체의 완성이다. 정치통합은 단일정치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순탄하게 그리고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체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형의 통일은 완성되나, 오랜 분단기간동안 진행된 이질화로 벌어진 남북한 주민의 의식차이를 극복하는 문제 등은 계속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국가 및 사회조직체의 통합조정, 생활양식의 동질화, 대외관계의 재조정 등도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모든 과제가 성취되어야 민족공동체는 단일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한국의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가) 민족의식, 민족통합을 위한 노력

남북한 동포의 민족의식은 전통문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후의 절연된 상태에서 삶의 삶이 남북한 주민들의 전통문화 인식에 많은 변질을 가져 왔다. 이러한 이질화된 요소들의 극복이 이루어져야 민족동질성이 회복된다. 남북통일을 이룬 후 완전한 단일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 문화전통의 통합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 문화통합의 과제는 문학과 예술의 이질성 극복,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및 생활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다. 남북한의 문학, 예술의 이질성은 매우 크다. 남한의 문학과 예술이 지니고 있는 창작의 자유, 주제의 다양성, 문학성과 예술성 지향, 다양한 양식의 혼재 등은 북한의 경우 용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 극복의 방향은 결국 문화과 예술 창작의 자유 및 다양화의 추구일 것이다.

#### 나) 사회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비

남북한이 하나의 사회단위로 작동하려면, 북한사회가 전체주의 사회, 획일화된 사회, 일당지배의 사회체제의 민주주의 체제,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이익집단의 힘의 균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북한 인구구조에서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1954년 이후 출생자의 비율이 남한이 69%, 북한이 74%이고 이 구성비는 2010년이면 남북한이 각각 80%, 9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세대는 <생활의 질>향상이라는 실용주의 집단주의에 앞세우며 획일적 행동양식보다는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양쪽이 세대교체를 통한 동질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한 공존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동질성 형성을 순조롭게 할 것이다.



#### 다) 통일한국의 외교안보를 위한 준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도 주변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일한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변국과의 우호선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외교와 안보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한국의 안보환경 및 외교과제는 통일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의 근원이 북한으로부터 러,중,일로 다변화하고 동북아 4강 균형체제가 군사적으로 통일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5강 세력 균형체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자체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위력의 유지와 주변 4강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를 기초로 하는 동맹체제 구축, 그리고

다자간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여 국제질서에 의해 자주권을 지켜 나가는 국제질서 차원의 노력 등 3차원적 안보보장체제 구축에 두어야 하며 그 사상적 기초는 <평화공존>이어야 한다.

## 2. 獨逸統一과 教育

### 가. 서독의 통일대비교육

#### 1) 학교내에서의 통일교육

서독에서 독일문제와 관련된 주제영역들이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KMK<sup>26)</sup>에서 동방학(Ostkundie)의 개설을 결정한 이후이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된 것은 1978년 11월 23일 KMK에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지침을 발표한 이후이다.

KMK의 이 지침<sup>27)</sup>은 서독의 각급학교에서 행하여지는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전문은 “독일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과 평화와 자유속의 재통일에 대한 의지는 계발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다른 부분과 그들의 주민, 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대하여 아는 일을 필수적인 전제이다<sup>28)</sup>”라고 시작함으로써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기본입장하에서 제 1장에서는 동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에서 실시되는 통일을 위한 교육적 활동의 기준으로서 서

26) 여기서 KMK라 하는 것은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독일 연방공화국 주 교육부장관 상설회의)를 칭한다. 즉 서독은 베를린과 1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기본법 제 30조에 의거, 초중고교육에 대한 권한은 각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교육정책에 관한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각 주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상설회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 주간의 이견조정 및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27) 이에 관하여는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1979) :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aus den Jahren 1956 bis, Wiesbaden 1979, S.245~256* 참조, 김승일(1993),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향원 이용필교수 회갑기념논문집』, pp.493~494 재인용

28) A. a. O., S.246.

독의 기본법(Grundgesetz) 및 동서독관계에 관한 기본조약(Grundvertrag)등 여러 가지 협정이나 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청소년들은 독일의 분단을 직접 경험한 구세대와 마찬가지로 국토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하여 학교는 독일국가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과 평화와 자유속에 자결을 바탕으로 한 독일민족의 통합에 대한 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그 과업을 부과하고 있다.

3장에서는 실제의 수업상황에서 고려하여야 될 여러 가지 유의점들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 (1) 독일문제라함은 동시에 유럽문제를 의미한다.
- (2) 독일의 분단은 동서간에 갈등관계 속에서 파생된 문제이므로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 정책을 통하여서 달성될 수 있다.
- (3) 독일의 항구적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 (4) 민족적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한 것이다.
-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즉 나치독재에 의해 야기된 독일의 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든 독일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은 중세독일인들의 이주이래 공통의 역사,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결속되어 있다.
- (7) 독일민족은 공동의 국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국적을 갖고 있다.
-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적 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 척도하에서 비롯된다.
- (9) 동독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자명한 권리이자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 (10) 인권에 대한 요구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 (11) 동독의 폐쇄정책은 서방측의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12) 독일통일에 대한 동독주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13) 동독주민들은 그들의 재건 능력에 있어서 점증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14) 독일의 통일은 항상 우리들의 목표이다.

(15)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BRD)이상이다.

제 3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4)항과 15)항으로서 여기서는 학교수업에서의 독일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통일이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문제를 학교의 실제수업 장면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KMK의 기본입장은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은 민족적 목표라는 관점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래의 시민들인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국제적인 맥락소에서 이해시킴으로써 앞으로 독일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교육<sup>29)</sup>이 이와 같은 목적을 도외시할 경우 정치교육은 그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독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 교육의 중요한 핵심영역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곧 통일교육임을 시사하고 있다. 1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일이 BRD이상이라 함은 전체독일이 아니며 그 국민은 전체 독일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즉 독일이라 함은 BRD+DDR을 의미하며 독일국민이라 함은 동독과 서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실제수업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의식시켜야 하며, 독일인과의 특히 독일의 다른 부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영원한 유대감정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실제수업장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몇 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1) 독일문제는 특히 역사, 사회생활, 공동사회연구, 지리와 독일어 등의 교과목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2) 역사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취급되어야 한다. 독일국가의 생성과 관련된 주제들 : 중세 독일민족의 이주사, 종교개혁, 농민전쟁, 19세기 민족자유화운동, 1871년의 독일제국 수립, 국가사회주의:독일의 분단 및 독일동부지역의 상실과 관련된 나치주의의 팽창정책. 상급학년 을 위한 전후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점령 지역내에서의

29)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 또는 국민윤리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서, 서독에서는 각 주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Sozialkunde(사회생활), Gesellschaftslehre(사회론), Politik(정치), Gemeinschaftskunde(공동생활연구)

독일분할, 포츠담 협정, 독일동부지역의 분할분리 및 독일인의 추방, BRD와 DDR의 수립, 동서긴장관계 속에서 양대 군사동맹의 생성 및 그 의의, 60년대말 이래의 긴장완화 노력. 끝으로 인문계 상급반에서는 독일문제에 관한 지식의 확충 및 심화에 주력해야 한다. 3) 사회생활교과서에서는 동독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특징을 다룬다. 4) 지리교과서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구조와 각각의 주특성 및 동독지역, 구 독일 소유의 동부지역과 베를린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동독과 서독의 경제와 사회의 비교에 있어서는 에네르기공급, 산업이주, 환경보호, 교통, 관광사업, 유럽 공동시장(EC)이나 동구 공산권 경제상호원조협의회 (COMECON)에의 가입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급 고학년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특히 다양한 문학적 애프크에서 독일민족과 관련된 문화적 의미가 논의되어야 한다. 동독의 문학작품들은 상급과정에서 다루어진다. 6) 그 외의 교과들, 특히 음악이나 미술수업에서도 독일문제나 독일의 상홍과 관련되는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KMK의 지침은 통일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제, 학습의 내용영역 물론 사태의 분석, 문제의 진술, 중요한 사항의 논리적 입증, 방법론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각급학교의 역사, 국어, 지리 및 그 밖의 정치교육에 해당되는 교과서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각 주는 자기 상이한 학교제도 속에서 독특한 교과운영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교과목의 이수학년이나 수업시간의 배정 및 구체적 교과 내용 등은 서로 다르게 독자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으나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속에서 각급학교의 5-13학년 사이의 정규수업과정을 통하여 공히 실시되고 있다.

## 2) 학교 이외의 교육

서독의 각급학교에서는 KMK에서 제시한 교육지침에 의거 정규수업과정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러 기관, 예컨대 교회, 정당, 노조, 민간단체 등에서도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분단양쪽에 살고 있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순수한



개인적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외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는 연방주차원의 정치교육센터, 전독문제연구소(全獨問題研究所), 정당출연재단<sup>30)</sup>, 민간등록단체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독일문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출판물을 제작하거나 외부의 출판활동을 지원해준다. 또한 동독의 실생활에 대한 필름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독일통일, 양독체제의 비교, 양독관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독일문제에 대한 각종 세미나를 주관하기도 한다. 특히 내독관계부<sup>31)</sup>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동독 방문기회를 제공하여 민족동일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동독의 실상을 확인시킴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독일분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서독시민들 개개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독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동독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양독간의 체제비교와 유럽제국과 양독간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족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키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되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되는 BRD의 체제가 DDR의 체제보다 우월함을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함과 아울러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재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과 확고한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독의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독일의 다른 부분의 분단 동독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공동책임의식 속에서 상호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며 단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독일통일을 위한 내적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0) 정당출연재단의 예로는 아데나우어(Adenauer)재단, 나우만(Naumann)재단, 에버트(Ebert)재단, 한스 자이델(Hanns-Seidel)재단이 대표적이다.

3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Hrsg.)(1986): Informationangebot zur deutschen Frage, Neuaufgabe 1985/86, Köln 참조.

## 나. 독일통일 후 교육적 과제

### 1) 동독교육의 문제점

동독의 교육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수십 년 동안 변화없이 경직화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나타난 동독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동독의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 교육 및 사회안정과 사회주의 이념의 확고한 정착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학업성적 외에도 政治的 態度 및 당성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개성보다도 사회주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렇듯 동독의 통일은 갈등없는 사회와 사회주의의 필연성만을 가르쳤으나, 실제현실은 이와는 달리 고통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됐다. 또한 계급투쟁의 승리라는 개념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계층간, 계급간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동독에서는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에게 교육지침으로 소위 상식적인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동독사회에서의 상식의 범주는 동독사회구조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동독사회의 전근대적인 측면 즉 지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배타적인 측면은 동독인들의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증오 그리고 통일 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3) 동독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權威主義的 調和'로 표현된다.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이 은폐·잠복된 갈등구조가 항상 권위행사를 통하여 동독사회의 지배층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동독교육제도하의 학생들은 '사회주의 제도하의 그림인간'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개성상실과 사고력저하가 초래되었다. (4) 동독에서는 고등교육으로서의 大學教育보다는 직업교육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직업교육도 회계업무가 거의 교수되지 못하고 상업, 서비스업 등의 직업교육이 개발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기계장비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에 문제점이 있었다.

## 2) 동독교육의 개혁

통일 이후 반 년만인 91년도 5월24일 연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자들은 베를린에서 만나 동독지역의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동서독간의 교육통합을 서독의 교육제도가 동독지역에 도입 적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동독지역의 교육개혁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동독지역주민을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적응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독지역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새로운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32)</sup>. 이에 따라 과거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교육 과학정책은 폐지되었으며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행정의 개편, 연구비 및 학자금보조, 경제교육개편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구에 장학기관이 신설되고 장학관, 교장들이 새로 임명되는 한편, 교수과목과 교수목표도 크게 개정되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자연·사회·문화를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창조적 교수·학습장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한편,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친교적인 분위기에서 학교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배후조직으로 정치성에 입각하여 학생의 제반문제를 결정하였던 東獨自由青年聯盟(FDJ)과 前衛機關(Pionierorganisation) 등 정치성을 띤 단체들은 해체되었고 학과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치교육관련 점수제와 軍事教育制度 역시 폐지되었다. 1990년 외국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수립되어 러시아어는 제 2외국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5학년생부터는 영어, 불어, 러시아 중 한 과목을 제 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통합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통합에 따른 많은 사안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사수급의 차질문제이다. 즉 제 2외국어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어가 영어와 불어와 동일한 제2외국어가 됨으로써 러시아어 교사들의 과잉 및 다른 외국어교사의 부족상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2) 지금까지의 사상과 관련된 과목들의 교체와 이로 인한 교사들의 실직문제 또한 심각하다. 동독교육에서

32) 민족통일연구원(1992),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pp.41~42.

맑스주의와 레닌주의 등의 사회주의 이념을 홍보·전파하는 정치교육은 폐지되어 이 과목을 담당할 교사 6,500명들이 해고당하였거나 해고위험에 처해 있다. (3) 구동독 비밀경찰이나 공산정권에의 협조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대량의 교사를 파면한 문제 (4) 새로운 교과서의 공급차질과 지금까지와는 달리 모든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유아원 및 유치원 제도의 폐쇄에 따른 어려움은 교육분야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국가지원이 끊김으로 인해 유아원 및 유치원 교사들의 실적과 또, 이로 인한 여성들의 실업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 3. 效果的인 統一教育을 위한 課題

위에서 살펴본 통일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까?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이 떠맡아야 할 영역을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sup>34)</sup>.

(1) 통일준비교육 :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통일 이후 대비교육 : 통일 이후의 사회와 그 속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가. 긍정적 통일교육환경의 조성

일반적으로 통일의 효과는 가르치고자하는 교육의 방향(교육목표 또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고, 이 설정된 목표에 맞도록 교육내용이 짜여지고(내용의 적절성), 이것을 가르칠 교사가 신념과 확신(교사의 신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의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교육방향의 분명화, 내용의 적정화, 담당교사의 확신과 신념화의 문제가 중요하다.<sup>35)</sup> 현재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이 세가지의 문제는 어떤

33) 연합통신(1993), 「독일통일의 명암-동독 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pp.97~108.

34) 양호민(1993),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p.348.

35) 상계서, p.349.

실정인가? 아직도 “어떤 통일이 바람직하며,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야간의 의견이 다르고 재야단체와 운동권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과 대립되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하에서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반통일,반민족교육이다라는 매도조차 있어 왔다. 또 일부교사의 통일교육내용이 교육당국에 의해 ‘대학생들을 의식화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통일교육이 과연 적절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담당교사들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자 또는 교육계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가 바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통일교육의 효과는 이런 환경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나.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성문제

남한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통일의 주체인 모든 국민을 통일의 주역으로 만들으로써 통일추진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북한동포의 열망을 환기시키는 통일촉진책이 된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역할인 시민민주주의 정착은 국가발전의 목표임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기초적 준비과업이 된다<sup>36)</sup>.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상호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상호의존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고 반대로 민족사회를 모두가 자유롭고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는 민주공동체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차원의 교육을 상호 긴밀히 연계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민주시민의 자질의 배양과 관련된 내용에 강조를 두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통일과 관련된 지식과 행위규범에 강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7)</sup>.

36) 이상우, 전제논문, p.9.

37) 박병기(1992), “통일교육의 윤리교육적 접근과 과제”, 민주아카데미, 「민주문화논총」, 제21호, pp.98~99.

#### 다. 통일준비 교육대책

〈통일준비〉는 위에서 살펴본 통일추진단계〈분단관리 → 통일과정의 전개 → 통일한국의 관리〉중에서 분단관리와 통일과정의 관리단계가 이에 속한다. 분단관리는 통일을 위한 내적준비단계다.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정치질서가 될 민주공동체를 남한에 확립시켜야 한다. 통일한국의 경제운영을 위한 기초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흑자여던 서독이 통일독일 이후에 통일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정의 관리는 남북한 사이에 협조단계를 구축함을 뜻한다. 남북한이 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일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통일과정은 평화롭고 혼란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적대적 공존관계의 남북한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질화된 사회, 문화, 경제체제의 상용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 간에 체제상극성이 줄어들게 되며 동시에 생활환경의 동질화, 문화의 동질화, 인식의 동질화가 진행되면 남북한 주민사이에는 〈시민의식〉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sup>38)</sup>. 그리고 나면 단일정치체제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준비〉단계에 필요한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아교육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체계, 통일교육의 목표, 방법 및 교육상의 유의점을 망라한 교육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sup>39)</sup>.

둘째로 지향해야 할 이념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님을 소련이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등의 사례를 통해 이해시킨다.

세째로 불완전하고 많은 약점이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가 우리의 통일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체제임을 인식시킨다.

네째로 국민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의지, 꿈을 키우는 데 강조를 두고 중,고,대학에 이를수록,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이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sup>40)</sup>.

38) 이상우, 전계논문, p.12.

39) 박병기(1994), "통일교육의 방법과 내용", 한국국민윤리학회, '94통일문제워크샵 발표논문. pp.9~10.

40) 양호민의, 전계서, p.353.

#### 라. 통일 이후의 대비교육

통일비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통일독일과 통일이멘의 분열은 비록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통일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코 불필요한 일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다. 통일만 되면 모든 아픔이 사라진다는 만병통치적 생각은 이미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남북한간의 체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형상의 통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분단고착으로 인한 제반 이질화를 극복하는 문제는 계속 과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의식차이의 극복, 국가 및 사회조직체의 통합과정, 생활양식의 동질화 등이 큰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각 과정에 맞게 독일, 예멘,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을 소개하고 우리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떤 삶이 전개될까”에 대한 상상을 예견해보도록 하는 내용을 각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이 수반함을 이해시키고,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마. 통일안보 교육의 강화

그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이 냉전적 반공교육이었다는 비난이 있어 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 제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통일지향적인 내용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5차의 ‘통일안보’생활영역을 ‘국가 생활’에 통합하였으며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적 삶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명칭을 ‘국가·민족 생활’로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현재의 적대적 대결구조가 교류, 협력의 구조로 옮겨가야 하며, 그 단계가 성숙되면서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전개에 있어 통일로 가는 흐름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의 대응은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에의 위협은 대남공산화전략을 포기하고 앉고 있는 북한당국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한반도에 통일국

가가 등장하는 것을 원치않는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거나 그 성취를 위협하는 요소의 제거와 그 발생의 예방을 의미하는 ‘통일안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sup>41)</sup>.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에서 추구해가는 평화도 ‘한반도에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극적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갇가지 불의와 불공평이 지배하는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안보의식과 통일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나, 현실적으로는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해오고 있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실체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편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교육을 정권적 차원 또는 분단체제 유지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데서 벗어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최근의 북한 핵무장과 관련된 사태를 봐서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안보불감현상의 팽배에서 보듯이 통일을 위한 안보교육이 다시 강화해야겠다. 다만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의 것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41) 한용원(1993),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남강 김갑철회갑기념논문집』, pp.484~485.



## V. 결 론 :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통일환경의 추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환경에 대해 북한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하려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분단 40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된 한국의 통일추진능력과 통일문제해결에 새로운 요소로 등장한 남한의 사회변화를 고찰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여건의 변화를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 5차 교육과정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제 6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달라진 통일여건에 통일교육의 현황이 적절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먼저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통일여건의 변화에 의거하여 새롭게 통일문제를 재구성했으며, 서독이 어떻게 통일을 대비해 교육을 전개해 왔으며, 통일이 된후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그리고 나서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그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반도통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온 국제환경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수년간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역사적 대변혁을 경험하였다. 지난날의 냉전체제의 특성상 냉전의 종식없이 우리의 분단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분단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통일을 막아오던 최대의 국제적 제약을 풀어주었다. 이제 한민족에게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국제환경 변화의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지난날의 이데올로기와 군사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지배적 이슈로 등장하고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추세는 EC와 NAFTA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경제적 생존과 발전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냉전 이후의 국제현실은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증대되는 동시에 경쟁과 갈등관계도 심화됨을 뜻하며 이는 남북한이 대결과 대립이라는 소모전에서 벗

어나 경제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북한은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군사능력, 경제능력 그리고 정치도덕적 영향력 등 모든 차원이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북한은 능동적으로 통일을 주도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북한은 전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에 집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한은 체제방어에 골몰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 핵무장이라는 전술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북한에 의한 전쟁의 예방이라는 평화정착의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

북한과는 달리 현재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북한을 능가하고 있는 데 이는 통일추진능력이 향상을 뜻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60년대 이후 출생하여 산업화 과정 속에 성장한 신세대가 주류세대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의식구조와 행동패턴이 통일추진능력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근의 의식조사는 통일과 안보관에 있어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사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나타난 안보경시 내지는 마비현상도 통일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대처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나라 안팎의 사정을 살펴볼 때 점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체제고수전략이 가져올 긴장과 대결국면은 여전히 <전쟁의 방지>라는 지금까지의 문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면한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21세기에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그 준비를 확실하게 해 나갈 시점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학교통일의 현황은 어떠한가?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통일교육은 주로 [바른생활]과 [도덕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5차 교육과정과 지난 1992년 고시된 제 6차 교육과정을 기초해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추출해 본다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에 기초해서 분단의 상황을 인식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라

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은 분단상황에 대한 이해와 통일이라는 과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자세를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학교 통일교육을 토대로 우리의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에 있어 교육방향이 아직 분명치 않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당교사가 확신과 신념을 갖는 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는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추세에 걸맞게 범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의 개념 재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정부가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보겠다.

둘째,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과의 연계가 약하고 내용상의 접근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상호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야 하기에 이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이 학교급별로 계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차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통일교육은 초등과 중등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체제에 유아교육에서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체계, 통일교육의 목표, 방법 및 교육상의 유의점을 망라한 즉, 학교급별 계열성과 차별성의 부각이 돋보이는 교육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통일전문가는 질적, 양적으로 많이 있으나, 통일교육전문가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종합성과 복합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담당교사는 물론 초,중,고, 대학 및 일반 성인들이 통일문제에 학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일학습센터를 건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1) 한국정치학회(1993),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 2) 민족통일연구원(1993),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3~1994」, 민족통일연구원.
- 3) 민족통일연구원(1994), 「예멘통일의 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 4) 강광식외(1993), 「통일휴유증 극복방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5) 교육부(1993), 「통일교육 지도자료」.
- 6) 교육부(1993), 「통일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89호.
- 7) 향원 이용필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1993), 「향원 이용필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8) 민족통일연구원(1992),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9) 연합통신(1993), 「독일통일의 명암-동독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합통신.
- 10) 양호민(1993),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 11) 남강 김갑철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 위원회(1993), 「남강 김갑철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12)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1994), 「21세기와 통일조국의 모색에 관한 학술 세미나」 논문집.
- 13) 고성준외(1993),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대왕사.
- 14) 서진영 편(1993),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5) 이상우(1993), 「함께 사는 통일」, 나남.
- 16) 한국일보사(1991), 「신세대-그들은누구인가」, 한국일보사.
- 17) 불브강베이지 이병기역(1988), 「동서독체제비교」, 고려대학교출판부.
- 18) 교육부, 「교육월보」, 1992년 2호.
- 19)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편(1992), 「한국통일과 그환경」, 형설출판사.
- 20) 박성조·양성철(1991),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1)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1979) :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aus den Jahren 1956 bis, Wiesbaden 1979
- 22)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Hrsg.)(1986) : Informatina-ngebot zur deutschen Frage, Neuauflage 1985/86,Koln 참조.

## 2. 論文 및 其他

- 1) 고대만(1990), “국민학교 도덕과 교과서 통일·안보영역의 내용분석”, 「도덕국민윤리과 교육」 제1호.
- 2) 김덕중(1992), “국제환경변동과 통일과정”, 한국정치학회 주최, 제3회 한국정치세계 학술대회(94. 7. 21)발표논문.
- 3) 김송일(1993),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향원 이용필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4) 김학준(1994), “북한핵과 동북아시아”, 제주신문, 94년 6월7일자.
- 5) 김호길(1988), “국제화시대의 통일교육과 이념교육”, 부산외국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논총」.
- 6) 박병기(1992), “통일교육의 윤리교육적 접근과 과제”, 민주아카데미, 「민주문화논총」 제21호.
- 7) 박병기(1994), “통일교육의 방법과 내용”, 한국국민윤리학회, '94 통일문제워크샵 발표논문.
- 8) 박점춘(1992),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민족통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제주교육대학원).
- 9) 송복, “포스트 6,25세대의 전쟁관”, 「한국논단」, 1994.6.
- 10) 이상우(1993), “북한의 개방화와 통일전망”, 서강대 동아연구소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 11) 이상우(1994),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통일문제 세미나」 (94. 5. 20)발표 논문.
- 12) 정용길(1993), “통일독일의 현장 경험 사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3)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21세기와 통일조국의 모색에 관한 학술세미나」(94. 5. 20)발표 논문.
- 14) 한용원(1993),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남강 김갑철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15) 김항원(1993), “통일교육방안의 모색”, 「항원 이용필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16) 한명희(1992), “6차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1992년 3월호.
- 17) 정세구(1993),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지역 연구협의회주최 「1993년도 통일교육연구 세미나」논문.
- 18) 고성준(1993), “주체사상의 변화와 북한의개혁”,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3집.
- 19) 김희(1993),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20) 유경숙(1985), “통일교육의 변천과 문제점”,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 21) 장경모(1993),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박사학위논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22) 「제민일보」 1994년 6월 7일자.
- 23) 「한국경제신문」 1994년 6월 11일자.
- 24) 「한국논단」 94년 6월호.

(summary)

## The Changes of Unification Condition and New Trend of Unification Education

Chang, Sang-Bo

Th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his thesis has two objects, the first one is to analyze the radical change in the unification circumstance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e three domain, namely,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e actualities of North Korea,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second one is to explore a new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 unification circumstance change.

as we enter the nineties, many factors that have hindered the unification since division are being weakened and vanished. The contents of the change are as follows. the end of the cold war, an ever-yawning north-south gap in national strength, improved capacity for unification of South Korea. these changes make our unification visibl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The change of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to our unification. these days, North Korea is attempting open-door policy which is yet much weaker than Chinese one. North Korea adheres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o maintain the system and to intensify the tension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so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o come—namely, dialogue or continuation of cold war—will be decided by how nuclear Problem will be settled. South Korea has showed the improved capacity for unification. but, she faces another difficulties, for example, insensibility to national security caused by the long-standing cold war and new generations' View of unification and security.

As we see it, the change in the unification circumstance will make the unification feasible in a long term, but in a short term, tension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system maintenance strategy of North Korea are expected.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unification is not clear yet and teachers lack confidence and faith. therefore, counter-measures are urgent.  
secondly, the linkage betwee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 and unification education must be strengthened and these two educations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thirdly, systemat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is needed.  
fourthly, we must cultivate the experts in unification education and establish centers of unification education.